

종합

특급 사교육 능가하는 U대회영어스쿨 중학생 수백여명 몰려 오늘 선발 시험

광주지역 성적 우수 학생 5대 1 경쟁 원어민 집중수업·U대회 도시 견학도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시범 교육이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경쟁률이 5대1을 넘어섰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마련한 이 영어프로그램이 중학생 부모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영어능력 향상뿐 아니라 이후 대학입시까지 좌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한 특별전형 96명 이외에 26일 시험을 치러 뽑는 일반전형 96명에 494명이 지원, 경쟁률이 5.15대 1까지 치솟았다. 당초 지원자 수가 100명 이하일

것으로 예상했던 시는 부랴부랴 시험장소를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자연대 3호관을 변경하고, 시험감독을 맡을 24명도 급히 모집했다.

이처럼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시범교육의 높은 인기는, 집중학습 방식의 높은 교육 수준과 학생 수준 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무료교육 및 유니버시아드 개최도시 방문 등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대 언어교육원이라는 신뢰감 있는 교육기관에서 실력이 검증된 원어민 강사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수준별 학습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 십만원씩 학원비를 내야 하는 유명 영어학원과 비교가 안 될

다는 것.

중학생 2학년 자녀를 둔 정모(45·서구 화정동)씨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아이에게 시험을 보자고 설득했다"며 "아이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 곧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선발 및 수준 테스트를 통한 반 편성 용도로 사용된다. 시교육청에서 선발한 특별전형 96명도 이날 같이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전형 합격자와 반을 편성, 1월4일부터 8일까지 원어민 강사에 4박5일간 집중교육을 받는다.

시는 시범교육을 마치고 내년 봄 시교육청과 함께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본교육에 들어가 희망 중학교에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개

설하고, 방학 때는 집중학습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본교육에 들어갈 때 이번 시범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포함해 공개 모집할 예정에 있어 이 때의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이 프로그램이 2015년까지 계속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해 2011년부터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상중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도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스스로 자원봉사자를 하고 싶어 직접 문의도 빗발쳤다"며 "이번 영어스쿨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지역 내에 각인시키고, 훌륭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설

'지방의회 쇠신'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가 하면 의원 간 갈등으로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광주시의원은 6명에 달한다. 전체 광주시의원의 3분의 1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전남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질 태세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지난 23일 전남도 3차 추경안은 투표절차도 거치지 않아 원천무효"라며 "농민단체와 연대해 '결의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의회 역시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 간 갈등으로 상임위의 결도 못하는 등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현직 의장이 농협조합장에 출마해 빈축을 샀던 광주 북구의회가 이번엔 의원 간 내분으로 후임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고 남구의회 모 의원은 500만원이 든 돈 상자가 배달사고를 일으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넣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가 순항하려면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예산 낭비와 비리는 주민의 손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주민감사 청구 같은 합법적 견제 수단을 활용해 탈선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체를 바로잡는 데 지역 주민이 적극 나서야 한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은 내년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단결로 의원을 제대로 뽑는 것이다.

기아차, 이젠 지역민·지역경제도 생각하라

기아차 노사가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늦어도 28일까지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야 연내 협상 마무리가 가능한데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노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현대차 노사가 최근 15년 만에 처음으로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 짓고 상생경영의 계기를 마련한 것과 대조를 보여 안타깝다.

우리가 기아차 노사협상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아차가 잘 굴러가야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 없었다면 오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지역경제는 건설경기의 몰락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최악이다. 불황의 장기화와 구직난 등으로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기아차가 또 파업을 한다면 광주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역민들이 이번 임단협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기아차는 지난 6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부분·전면 파업이 발생해 무려 '19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8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다면 국민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기아차 노사는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한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 없었다면 오늘의 기아차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아차 노사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성사시켜 상생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금남지하상가 영업피해 해법 고심

광주시·문광부·상인 보상 합의점 못찾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로 서석로가 폐쇄되면서 금남지하상가 2공구 내 점포의 매출이 감소,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자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해법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영업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금남지하상가 2공구의 관리운영주체가 민간업체라는 점에서 접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금남지하상가 2공구 상인 20여 명은 지난 24일 오전 시청을 찾아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주체인 문광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영업피해 보상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서석로 폐쇄로 인해 유동인구 급감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광부와 광주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와 사례 등을 검토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날 금남지하상가 2공구 현장을 찾아 "폐쇄된 구간에 보행로를 놓거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상인들에게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현재 금남지하상가 2공구의 운영관리책임은 2011년까지 민간 기업에게 있으며 따라서 관리비 감면 등 지원책도 해당 기업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광주시는 문광부 및 관리운영주체의 상인들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를 위해 옛 전남도청~옛 노동청 사이 120m 길이의 옛 서석로를 폐쇄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당 예결위 점거 농성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크리스마스인 25일 당소속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가 박주선 최고위원, 문학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대강 예산 막판협상 진통 거듭

오늘 4자회담서 절충 시도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새해 예산안 합의의 도출을 위해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한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2+2회담'의 협상대표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후 전화접촉을 갖고 4대강 예산 절충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2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사업비 3조2천억원에 대한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로, 한나라당은 이 비용의 일부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

이나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수중보 개수와 높이, 준설량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는 4대강 사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양당은 26~27일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4자회담'을 열어 4대강 문제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측이 충분한 사전교감이 없는 4자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자회담을 통한 절충이 무산될 경우 양당은 27~28일 각각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화순 동천 등 호우피해 공공시설 조기복구

도, 지역 업체 제한 발주

전남도는 올 여름철 호우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사업 등을 도내 업체로 제한해 발주하고 내년 장마철 이전 조기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화순 동천 등 관내 3개 하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최근 복구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 등을 지역업체로 제한해 입찰절차를

진행중이다.

피해시설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현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는 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49억 원이다.

전남도는 통합 갈리용역의 경우 분할발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화순 동천 등 관내 3개 하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최근 복구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 등을 지역업체로 제한해 입찰절차를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손가정 4,800여 가구

전남도, 김치 긴급 지원

전남도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생활이 어려워진 지역내 저소득층 조손가정을 위해 김치 등 부식을 긴급 지원한다.

25일 전남도가 발표한 부식 지원대상은 도내 저소득 조손가정 2천601가구, 7천191명이며 이중 기초생활 수급 조손가정은 2천267가구 6천202명, 차상위 조손가정은 334가구 989명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7일까지 여성단체 등과 함께 김장 담그기 등을 통해 부식을 마련, 이들 가정에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비 2억2천1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1가구당 8만5천원 상당의 쌀과 김치 등이 제공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치안감 이하 전직원

경찰관 체력 테스트

경찰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청장(치안감)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경찰관 체력 향상을 위해 체력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치안감인 지방청장급 이하로 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측정 종목은 1천200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약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등 4가지이다. 경찰은 체력 검정 결과를 등급으로 나눠 직장훈련 성격에 포함해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뭐가 있어야 떠돌고 자시고 하지

정남진 한우 등 전남 우수 농수산 가공식품 71개

향후 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

전남도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4개 업체 71개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 허가를 받은 제품은 순천 우리 밀 제과(주)의 우리 밀 초코마린 등 11개와 순천 한술 영농조합법인의 우리 쌀 떡국 떡 등 3개, 화순(주)오성식품의 우리 콩 두부 등 2개 제품, 장흥 한라농장 표고버섯, 장흥 축협이 정남진 한우 등이다.

이 제품들은 모두 도내 우수 친환경 농축산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및 심사위원의 품질·위생관리 실태 점검 등을 거쳐 선정됐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지역 생산 우

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제고 및 홍보를 통한 판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211개 업체 692개 제품에 이르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한 제품은 재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및 소비자들이 인증마크 부여된 상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그동안 전남도가 인증해준 600여 개 제품은 이마트와 하나로 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및 택배·수출·학교급식 등으로 수도권 등 전국과 해외에 유통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체육팀 2200-691	사건부 2200-691	사설부 2200-57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